

# 經濟開放論議의 理論的背景과 方法論에 관한 小考<sup>1)</sup>

表 鶴 吉\*

## <目 次>

I. 서 론	1.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II. 경제개방정책과 찬반논의	2. 비주류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1. 수입자유화 계획	3.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	IV. 새로운 이론체계와 방법론 3. 찬반논의
III. 찬반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의 모색 참고문헌

## I. 서 론

오늘을 사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경제개방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것이다. 지난 25년간 추진되어온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은 양적인 면에서의 눈부신 성장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문에서 二重構造와 歪曲을惹起하였다. 그 결과向後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는 이러한 二重構造와 歪曲을 어떻게收束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1980년대초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온 경제개방문제를一部에서 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先決問題로 간주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경제개방이 二重構造와 歪曲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小規模開放經濟가 經濟發展의 諸段階에서 어떻게 對外開放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開放의 程度와 速度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發展經濟學(Development Economics)의論議에서도 명확한 설명이 생략

\* 서울大 社會大, 國際經濟學

1) 본稿는 필자의 「경제개방정책과 자립경제」(현대사회 1986 봄호)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설명의 공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각국의 발전양식과 시간적 공간적 차원이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共通의 法則을 발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경제체제속에 깊이 병합되어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경제개방의 양태와 속도에 의해 경제내의 거의 모든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경제개방은 상품시장 개방과 금융보험·자본시장등 씨어비스부문의 개방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所得分配, 經濟政策의 統制力, 外債管理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경제개방은 정치·사회·문화 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목적은 경제개방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정책적 제논의를 方法論的 視覺에서 再照明해 보고 그 理論的 含意를 모색하는데 있다. 블라우(Blaug, 1980:xiii)나 맥럽(Machlup, 1978:63)이 지적한 대로 현대경제학에서 방법론은 거의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경제이론을 구성하는 가정과 이론이 갖는 예측면에서의 含意간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가 모호해졌다. 또한 경제학자들이 실증자료를 통하여 그들의 이론을 정당화하였을 때 과연 그것이 그 이론의 가정에 관한 정당화인지 아니면 그 이론이 갖는豫測面의 含意를 정당화하는 것인지를 분명하지 않다(Blaug, 1980:xii). 가령 어느 소국경제가 계속적인 경제개방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는 설레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개방-발전형제의 가정들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小國經濟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 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르달(Myrdal)은 경제학자들이 비경제적 요인들을 측정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론에 대해 痛駁한 바 있다(Myrdal, 1968: 1941-42). 그는 경제변수가 보다 객관적으로 관측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에 구애 받지 않는 경제정책상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미르달은 이와같이 경제변수와 비경제변수를 분리하는 방법론은 사람들의 태도와 사회제도가 西歐의 경우와 같이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경우에는 어느정도 타당하겠지만 아시아각국이 갖고 있는 정치·사회·역사적 유산밑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론이라고 지적하였다.

워드(Ward, 1972)가 지적한대로 경제학의 분석기법에는 과학성을 배제시

킬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제 그 자체는 규범적 (normative)인 것이 사실이며 본고에서 다룰려고 하는 소국경제의 경제개방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개방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주류경제학의 입장을 취하든 비주류경제학의 입장을 취하든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재考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론체계로 부터 또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개별적인 이론과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맥락이 지적한 대로 방법(method)과 방법론(methodology)은 구분되어야 하며 방법론은 과학적명제들을 수락 또는 기각하기 위한 제원칙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는 경제개방의 논의에 현실감각을 부여하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온 경제개방의 내용과 향후계획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배경들과 방법론적입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본 다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경제개방의 이론적 방향과 방법론적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II. 경제개방계획과 찬반논의

한 나라의 경제개방은 크게 나누어 상품·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은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극히 최근에 들어와서 부각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경제개방의 논의가 주로 수입자유화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먼저 수입자유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0년 이전에는 수입자유화정책이 극히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에는 수입허가품목명시제 (Positive System)에서 수입제한품목명시제 (Negative System)로 전환시킴으로써 부분적인 수입자유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의 주된 목적은 수출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투자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제공하기 위한 수출촉진책이었다. 그후 1970년대를 통하여서는 국내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상당히 억제되어 오다가 1977년에 당시 중동특수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자동승인 품목을 상당수 증가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79년의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수입자유화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따라서 비교적 본격

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자유화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81년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 수입자유화계획

경제기획원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추진된 수입자유화 노력의 결과 전체품목의 자유화율(전 품목에서 자동승인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68.6%(1980년)에서 87.7%(1985년)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독과점 품목의 경우는 35.7%(1981년)에서 78.0%(1985년)로 증가하였다. 또한 1985년 11월에 발표된 향후 3년(1986~88)년간의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의하면 1988년까지는 전체품목의 자유화율을 95.4%로, 그리고 독과점 품목의 자유화율을 98.9%까지 제고시켜 OECD수준의 수입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이다. 발표된 예시 품목은 총 6백 3개 품목으로 1988년에는 TV, 카메라, VTR, 컴퓨터 주변기기 및 2천 cc 이상 승용차등도 수입될 예정이며 이중에는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시장개방을 요청하여온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입자유화계획이 명목상의 자유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화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평균관세율도 현재의 20.3%에서 1988년에는 16.9%수준으로 인하시킬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Economic Bulletin, November 16, 1985).

정부는 수입자유화정책 추진의 근거로 우리의 1985년 수입자유화율 87.7%는 특별법상의 제한 품목을 포함할 때 사실상 65.3%에 불과하며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폴의 수입자유화율(98%)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해외협력위원회, 1985). 또한 1984년 수입통계를 통해 내수용 품목의 경우 전 품목이 7.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수입자유화 품목은 △22.1%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반대로 수출용 품목의 경우에는 전 품목 증가율(34.7%)을 훨씬 능가하는 수입자유화 품목의 증가율(77.1%)을 기록하고 있다. 즉 수입자유화의 효과가 주로 수출용 품목의 수입증대로 나타났다고 보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발전전략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단기적, 부분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수입자유화 추진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통때문에 수입자유화 추진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해외협력위원회자료에 의하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입자유화의 단계적 추진과 수입예시제의 활용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제한제도, 관세율 인하 등도 자유화정책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해외협력위원회, 1985:25). 실제로 정부는 최근 기계공업·조선공업 육성법(1967), 전

자산업육성법(1969), 철강 및 석유화학육성법(1970)등 실질적으로 수입제한의 근간으로 존재해 온 제반 육성법을 수입자유화에 부응하도록 통폐합하였으며 관세율의 전반적인 인하와 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 2. 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

정부는 대외개방정책의 추진방법으로 (1) 예시제에 의한 단계적 개방 (2) 경제전반에 걸친 개방, 그리고 (3)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해외협력위원회, 1985:23). 특히 경제전반에 걸친 개방이 필요한 이유를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상호연계가 되는 서비스, 투자, 기술, 자본등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구하고 있다.

「수입자유화와 함께 금융·보험등 서비스분야의 자유화가 뒷받침되어야 제조업분야도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술도입자유화, 투자자유화가 되어야 선진기술의 도입, 경영기법개선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며, 지적소유권보호는 국내발명가의 새로운 창작의욕과 첨단기술의 자체개발을 촉진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개방정책은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수입자유화가 필요하고 수입자유화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며 또한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국제수지 적자는 다시 수출증대에 의해 보전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순환논리에 빠져있는 셈이다.

사실상 1981년 이후 수입자유화정책이 추진되는 것과 병행하여 금융자율화가 표방되었고, 외국은행지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총 52개사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은행의 1984년 영업이익규모는 총 6백 94억 원으로 5개시중은행의 순이익 5백 25억 원을 능가하였다.

정부는 보험·영화·광고등의 부문에서도 계속적인 개방압력을 받아왔으며 보험의 경우 1987년부터는 사실상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 교역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개도국 일반의 입장과 일치할 수 없으며 특히 건설, 공항운수, 의료서비스등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철폐를 주장하여야 할 것임. 서비스분야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찾아 육성해야 할 것임. 경제개

방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화를 통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 원화의 교환성을 추구해야 할 것임」으로 요약된다(해외협력위원회, 1985:28).

지적소유권의 보호문제는 서비스부문의 개방화중 핵심적으로 부각된 문제이다. 지적소유권은 물질특허와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보호권을 대상으로 하여 소급적용의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이외에는 198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하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지적소유권 보호는 우리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으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있어야 국내산업도 연구개발투자를 할 의욕이 생기며 발전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내·외국인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 수준의 보호를 허용토록 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을 보기로 하자. 정부는 1984년 7월 1일자로 이미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와 기술도입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크게 간소화 하였으며 투자허가업종명시제도(Positive List System)로 부터 투자제한업종명시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여 투자자유화율을 1984년의 66%수준에서 1988년에는 90%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50% 미만, 일정금액이하의 외국인투자는 자동인가할 방침이다. 기술도입허가제 역시 인가제로 변경하고 신고한 후 20일 후에는 자동인가가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개방화의 근거로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1984년 현재 21.2억불로 싱가포르(57.5억불), 대만(44.5억불)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과, 국제수지개선과 외채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선진기술도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주식시장의 개방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작년 11월 11일 외국인의 주식투자제한을 부분적으로 철폐하고 코리아 펀드(Korea Fund)의 설립운용을 허가한 바 있다. 따라서 1987년 후반기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취득, 배당금 및 처분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개방화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찬반논의

지난 5년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는 수입자유화·민간주도경제·금융자율화등으로 요약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입자유화만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입자유화를 선두로하는 일련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상당한 찬반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표방한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개방진략이 추진되어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개방화정책에 찬성 내지는 비교적 호의적인 견해도 대개 상품수입의 자유화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KDI의 양수길박사는 1970년대(특히 후반기)를 통하여 수입대체적인 중화학공업부문의 보호육성을 위해 기계공업에서의 부품국산화 규제등을 통한 수입제한조치가 강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입자유화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Young, 1984:22-25). 그는 197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수입제한에 의한 보호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국민소득의 13%에 해당될만큼 높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추정하였다. 홍원탁 교수는 1982년 현재 명목적 수입자유화율은 76.6%이지만 수입이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는 소위 자동승인품목을 제외하면 자유화율은 56.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총수입액중에서 자유롭게 수입된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 즉 수입액기준으로 볼 때의 수입자유화율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하였다(Hong, 1985). 홍교수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 즉 비교우위가 있던 노동집약제의 수출촉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었던 수입규제조치는 소비자잉여의 손실을 초래하였지만 이를 능가하는 수출증대의 이익으로 자원배분면에서의 비효율성을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홍교수는 그러나 비교우위가 없던 자본집약적 수입대체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들은 소비자잉여의 손실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다같이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홍교수는 국내임금이 상승하고 중국과 같은 새로운 경쟁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보다 자본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에로의 계속적인 적응을 도모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결국 이러한 산업조정과정에서 수입자유화를 촉진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윤신호(profit signals)」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간에는 반대의 요지와 강도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다. 박현채교수나 이대근교수는 종속론적 시각에서 개방정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박현채, 1985, 이대근, 1985) 신용하교수는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특히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신용하, 1986). 또한 박우희교수는 개방정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선별적·단계적 추진을 옹호하고 있다(박우희, 1983:291, 1985).

찬반논의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입자유화의 제반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를 거의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수입자유화가 국내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데 대한 논의에서도 자유화론자들이 경쟁력제고를 통해 기술수준향상을 기대하는 반면 신용하교수 같은 분은 기술혁신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같이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종속론적 비판도 남미의 사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한국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분석할 만한 이론적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방논의를 시발시킨 수입자유화정책이 <sup>국</sup>  
민족합의를 기초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잘못된 투자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사적 정책(reactionary policy)으로 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주도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정책이 추진되었을 때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경제정책운용의 기본원리의 입장에서 볼때 왜곡된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투자합리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수입자유화정책이 그러한 조치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하등의 이론적 근거가 없다. 비교우위가 없는 부문에 이루어진 투자를 수입자유화를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으로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중화학공업부문의 독과점 구조를 마치 시장실패의 결과로 생각하고 수입자유화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독과점 구조는 시장실패의 경우보다 정책적 산물이며 처음부터 독과점적 형태로 출발할 수 밖에 없도록 제약되었던 구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II. 찬반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현대사회에서의 모든 국가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을 통한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제 1 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복지후생에 대한 목표지향에는 동서의 구분이 없으며 선·후진국의 구분도 없다. 카아(Carr)는 일찌기 이차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가 각국의 정치적 독립현상이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경향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Carr, 1941).

사실 오늘날의 국제경제질서를 보면 각국이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하면서도 EC를 중심으로 한 구주공동시장,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공업국세력, OPEC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권, 그리고 UNCTAD를 중심으로 한 방대한 제 3 세계권으로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홍공업국들과 멕시코,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신홍공업국들은 경제력이나 세계경제체제에의 병합정도에 있어 여타 제 3 세계 국가들과의 동질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신홍공업국들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기에는 국제체제내에서의 영향력도 아직 모자라고 이들 국가를 블록으로 결성시킬만한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홍공업국들은 국제경제질서내에서 일종의 미아(迷兒)와 같은 위치에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 신홍공업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색은 전부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정책을 사용하여 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점에 있다. 경제성장이 상당수준 성취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수출품목이 선진국의 사양 산업품목과 중복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선진국들로부터 경제개방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홍공업국들이 경제개방압력을 받는 양태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가 전부 세계경제체제에 깊이 병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합의 양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들 국가의 외자도입현황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1981년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총외자도입중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싱가포르(85.1%), 대만(64.2%), 브라질(28.4%), 멕시코

(16.6%) 및 한국(5.7%)으로 되어 있다(World Bank, 1984). 또한 다같이 수출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지만 수출의 대GDP 비중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1981년을 기준으로 볼때 수출액/GDP 비율은 싱가포르(171%), 대만(53.4%), 홍콩(58.6%), 한국(39.7%), 브라질(8.7%) 및 멕시코(11.9%)이다(IMF, 1985).

따라서 선진국들에 의해 이들 신 Hong Kong 업국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개방압력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압력의 수단면에서는 차별적이고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방압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먼저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본 이론적 배경과 비주류경제학의 이론적 배경을 차례로 간략히 요약한 후 그들이 취한 방법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루하여 소위 「전환국가」((threshold country)<sup>2)</sup> 혹은 NICs의 범주에 해당될 때 선진국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경제개방압력을 받게 된다는 명제는 소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주류파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주류경제학의 신고전파적이론이 구조주의 이론을 비롯한 비주류이론과는 달리 경제단위간 또는 각국 경제간의 역학관계나 상호의존체계 보다는 각 경제단위 또는 각국 경제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에 대한 논의가 뚜렷이 부각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종속이론류의 비주류발전이론가들이 신고전파이론은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 이론에 대한 편집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전파이론을 계승한 현대적 모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자유무역이나 외자도입이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

2) 멘젤과 쟁아스는 'threshold country'(독일어로 'Schwellenland')를 신 Hong Kong 업국(NIC)과 혼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threshold'란 연속적인 발전단계에서의 특정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련의 다양한 국가적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환국가」란 이러한 뜻으로 필자가 의역해 본 것이다. V. Menzel & D. Senghaas "NICs defined. A Proposal for Indicators Evaluating Threshol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Dependency Issue in Korean Development: Comparative Perspectives,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e 6-8, 1985).

위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을 가져올 가능성(Bhagwati, 1958, Brecher, 1977)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이 자본축적과정을 거쳐 선진국과 대립되는 무역패턴을 가지게 될 가능성(Deardorff, 1979, Krueger, 1977)이 적시되어 있다.

「전환국가」 또는 NICs가 중심권 선진국들로부터 경제개방압력을 받게 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정학적 설명과 동학적 설명을 동시에 요구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일부산업과 경쟁상태에 있는 현상은 정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반면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자본축적—경제성장이라는 동학적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학적 설명은 잘 알려진 헤셔—올린—사무엘슨(Heckscher-Ohlin-Samuelson)모형에 의존하는 것이 신고전학파이론의 기본구성이다. 이들의 기본체계는 헤셔—올린정리(Heckscher-Ohlin theorem)와 사무엘슨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로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과서적 설명(표학길, 1985)을 피하고 그 요체만을 약론하기로 한다.

헤셔—올린은 2국·2재·2요소모형을 상정하고 일련의 단순화 가정<sup>3)</sup> 밑에서 양국간 무역패턴은 각국에 부존되어있는 요소부존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유명한 헤셔—올린정리를 제시하였다. 헤셔—올린의 이론은 무역을 통하여 각국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무역패턴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가 자본집약재를, 노동이 풍부한 나라가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형태로 전개된다고 지적하였다(Olin, 1933). 사무엘슨은 이러한 헤셔—올린모형을 연장시켜 자유무역으로 재화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단일하게 형성되면 그 결과 각국내의 요소가격도 균등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Samuelson, 1948).

신고전파의 무역이론이 제3세계 경제발전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급자족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무역의 이익을 향유

### 3) 단순화가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각재화의 생산기술은 불변보수를 갖는 일차동차선을 가지며 생산증대에 따라 기회비용이 증대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양이며 투입이 증가됨에 따라 한계생산성은 체감한다.
- ② 각재화간의 생산기술은 서로 다르나 각국의 동일재화에 대한 생산기술에는 차이가 없다.
- ③ 각국의 재화 및 요소시장은 완전경쟁하에 있고 완전고용하에 있다.
- ④ 국내에서의 산업간 요소이동은 자유로우나 국가간 요소이동은 없다.
- ⑤ 수송비등의 부대비용이나 관세등의 무역제한조치가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고전파이론 역시 스미스, 리카아도류의 고전파이론과 마찬가지로 극히 정태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즉 저개발상태에 있는 한 나라가 자급자족을 탈피하여 무역을 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익이 어느정도 지속되어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신고전파적 2국·2재·2요소의 단순정태모형으로서는 중심권인 선진국이 반주변부인 전환국가 또는 NICs에 경제개방압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나하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들이 자본집약생산에 특화하고,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후진국들이 노동집약생산에 특화한다면 경제개방압력이라는 선후진국간의 긴장이 생성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고전파이론을 연장시킨 최근의 무역이론들을 통하여 신고전파적 전통내에서도 경제개방압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전파이론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종속론자들의 주장은 최근의 신고전파이론상의 발전을 무시한데 기인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신고전파무역이론의 현대적 확장은 크게 네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신고전파모형의 동학화를 통하여 무역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일련의 이론들이고,<sup>4)</sup> 둘째는 소위 비교우위의 연쇄가설(chain proposition of comparative advantage)로 접약되는 다국·다재모형으로의 확장노력이며,<sup>5)</sup> 셋째는 헥셔—올린의 기본가정중 특히 시장의 불완전성문제를 취급하

4)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T.M. Rybczynski, "Factor Endowment and Relative Commodity Prices", *Economica*, N.S. 12, No. 88(1955) pp. 336-341, H. Oniki & K.H. Uzawa, "Patterns of Trade and Investment in a Dynamic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 Studies*(January, 1965), R. Findlay, "Factor Proportions and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Long Ru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0) 및 A.V. Deardorff, "The Gains from Trade in and out of Steady-State Growth", *Oxford Economic Papers* (July, 1973), pp. 173-191등이 있다.

5)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J. Bhagwati, "The Heckscher-Ohlin Theorem in the Multicommodity Cas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1972), pp. 1052-055, A.V. Deardorff, "Weak Links in the Chain of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 No. 2(May, 1979), pp. 197-209 및 A.O. Krueger, "Growth, Distortions, and Patterns of Trade among Many Countries", *Princeton Studie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40, 1977등이다.

고 있는 이론들이고(Bhagwati, 1971), 마지막 네 번째로 주로 버논(Vernon)류의 기술의 개발과 이전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제이론등을 들 수 있다(Vernon, 1966). 이들 이론에 대한 상론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개방압력현상을 설명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 인용함으로써 신고전파이론에 입각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논점은 개발도상국가가 외자도입등으로 인구증가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자본축적을 해 나가면 결국 자본집약제의 생산확장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자본집약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립진스키정리이다. 이와같이 혼서—올린모형을 동학모형으로 일반화시키면 정태적 상태에서 굳어진 특화상태 즉 선진국—자본집약제, 후진국—노동집약제의 특화형태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 자체를 내생변수로 다루고 있는 디어도오프(Deardorff)등의 모형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무역패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변화된 무역패턴은 다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각국 간 무역은 각국의 자본/노동비율을 균형화시키는 성향이 있으며 이는 사무엘슨의 요소가격균등화와 같이 국제무역이 세계경제에 가져다 주는 일종의 동질화(homogenization) 경향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혼서—올린모형의 동학화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정태적 특화상태에서 벗어나 동태적 경쟁 상태로 돌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론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자본축적을 이룩한 개발도상국들을 「전환국가」 또는 NICs로 파악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산업에서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돌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구명은 혼서—올린 이론을 다국·다재모형으로 일반화시킨 이론들에서 구할 수 있다. 먼저 정학적 설명은 존스(Jones)에 의해 처음 제시된 비교우위의 연쇄가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Jones, 1956-7:1-10). 비교 우위의 연쇄가설이란 한마디로 각국에 대해 상대적 자본부존도에 따라 순위를 설정하면 각국이 갖게되는 비교우위상품의 자본집약도의 순위도 연쇄적으로 동일한 순위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예컨대 가장 자본집약도가 높은 상품은 상대적 자본부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의해, 그리고 가장 낮은 상품은 가장 낮은 국가에 의해 생산·수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선진국·중진국·후진국의 3국모형으로 해석하면, 중진국의 경우 그 수출상품이 후진국보다는 자본집약적 상품이겠지만 선진국보다는 덜 자본집약적일 것임을 시사해 준다. 한결음 더 나아가 디어도오프등에 의하면 이러한 명제하

에서 자본집약도 순위가 경제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선·중진국이 공통적으로 생산·수출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를 그러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동차가 선·중진국에 의해 다같이 생산될 수 있으며 다만 선진국이 중진국보다 더욱 자본집약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이다. 디어도오프는 특히 관세등의 무역장애요인과 중간재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연쇄가설이 붕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중진국이 비교우위의 연쇄체계를 건너뛰어 상당히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생산·수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선진국들도 사양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등으로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계속 생산 수출할 가능성이 남게된다.

연쇄가설을 완전특화의 모형으로 확장시킨 크루거(Krueger)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무역패턴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정을 통해서도 동학적으로 설명된다. 즉 개발도상국이 자본축적을 해나가면서 비교우위 상품은 이와 같은 비교우위의 사다리를 따라 보다 자본집약적인 재화에의 특화로 변화해 나가고 선진국의 일부 산업과 경합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비교우위의 연쇄가설이론은 각국간의 요소가격이 균등화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 이지만 관세·수송비등 제반요인 때문에 요소가격이 균등화되지 않는 상태가 더욱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헥셔—울린모형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중진국(전환국가) 상품이 선진국상품과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는 이론적 설명은 전술한 비교우위의 연쇄가설 이외에도 불완전시장 이론이나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도 가능하다. 바그와티(Bhagwati), 크루거(Krueger) 등에 의하면 어느 개발도상국의 상품 또는 요소시장에서의 경쟁이 불완전할 경우 보통보다는 훨씬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선진국과 경합상태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이론은 또한 국내시장의 일부가 생산독점하에 있는 경우 자유무역을 통해 독점을 파괴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자유무역에 의한 무역의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국내독점파괴—경쟁력제고의 논리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개방론자들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논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독점이 요소시장 역시 왜곡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자유무역을 통한 경쟁강화로 국제경쟁력이 내면적으로 단시일내에 회복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요소시장의 왜곡상황하에서 이루어진 투자가 독과점

상태를 필요악으로 초래하였다면 자유무역에 의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존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고전파이론의 현실적용적 측면을 생각할 때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옹호, 경제개방의 가속화논리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베논(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살펴보자. 이 이론에 따르면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성숙단계와 표준화단계를 지나는 동안 중진국이 동제품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단계에 들어가고 서로 경합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차대전후 라디오·흑백 TV·칼라 TV·VTR등 가전제품 수출시장에서의 미국·일본·한국의 경합패턴을 보면 기술이전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선진국에서의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력할수록 경합관계에 머므르게 되는 시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신고전파이론의 전통내에서도 선진국에 의한 대중진국 개방압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여러 이론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파이론의 약점(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강점이기도 하지만)은 이론자체의 지나친 순수성에 있다. 가령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진국에 의한 경제개방압력의 문제만 하더라도 신고전파이론은 왜 그러한 압력이 생성되는지 또한 과연 무한정한 경제개방만이 유일한 길인지, 그리고 경제개방이 완전히 달성되었을 때 과연 독립적인 국가가 자본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이론에 불과한 신고파적 이론에 대해 우리가 정치·사회·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공히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만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제3세계의 발전이론에 관한 종속론적 입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 2. 비주류경제학의 이론적배경

구조론자·종속론자들의 신고전파이론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논점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첫째, 신고전파이론의 기본가정은 제3세계의 현실적 측면과 꾀리된 것이므로 유추된 결론이 현실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이 상품 및 요소시장에서

완전경쟁이나 완전고용상태에 있지 못하며 특히 동일제품인 경우 선진국과 생 산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서 -올린류의 기본가정이 갖는 경직성은 신고전파이론가들도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경제이론이 그러하듯 어느정도의 단순화가정이 없이는 경제이론의 含意를 명쾌히 부각시킬 수 없을 것이다.<sup>6)</sup>

구조론자·종속론자들의 두번째 비판점은 후진국이 선진국과 교역하면 세계경제가 동질화(homogenization)될 것이라는 신고전파적 명제가 허구라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은 자본집약재에, 노동이 풍부한 후진국은 노동집약재에 특화하여 자유무역에 임하면 그 결과 선·후진국의 요소가격도 균등화될 것이라는 것과 발전단계를 이행함에 따라 선진국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발전단계론식의 설명은 역사적 실증적인 측면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프레비쉬(Prebisch)와 같은 대표적인 구조론자는 선·후진국간의 동질화를 반박하는 근거로 농산품의 대공산품교역조건이 악화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Prebisch, 1962). 프랑크(Frank), 아민(Amin)과 같은 종속론자는 주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발전경험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자본주의 확장과정이 주변부의 구조적 이질화(heterogenization)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Frank, 1967, Amin: 503-525).

그러나 프랑크나 도스산토스(Dos Santos) 등 초기 종속이론가들이 내세운 중심부-주변부의 단순도식적 관계로는 「전환국가」들이 중심부 선진국가들과 경합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경제개방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프랑크의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이라는 명제나 도스산토스의 이른바 다국적기업에 의한 「신종속(new dependency)」의 개념속에는 주변부에서의 저발전은 이미 숙명지워졌고 따라서 주변부는 언제나 중심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경합관계란 가능성은 이미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Frank, 1966, Dos Santos, 1970). 그들은 주변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그리고 어떠한 정도의 자본주의적 발전가능성도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세계자본주의체제를 독점의 위치에 있는 중심부와 피독점의 위치에 있는 주변부간의 국제분업체제로만 파악하였다.

6) Krueger는 재화 및 요소시장의 불완전성문제를 다루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불완전한 시장상태가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종속논의에서 가장 합당한 논의를 찾는다면 카르도소(Cardoso)와 에반스(Evans)등이 내세운 종속적 발전이론이다. 카르도소는 종속적 상황하에 있는 주변부국가도 자본주의적 발전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프랑크류의 종속—정체, 또는 종속—저발전의 단순도식에서 벗어나고 있다(Cardoso, 1972, 1973).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변부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소득분배라든가 부문별 주변화(marginalization) 문제를 해결한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프랑크류의 중심부—주변부간의 외부종속관계 뿐만 아니라 종속의 내부구조를 살펴보아야 「종속의 구체적 상황(concrete situations of dependency)」을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치제도, 계급관계, 사회형태 및 구조등 내부적 요인에 따라 종속상황하에서 어느정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카르도소는 이와 같은 종속상황하에서의 발전을 「결합종속적 발전(associated dependent development)」이라고 부르고 주변국가가 국제자본주의에 종속된 상태에서도 자국내의 국제화된 부르조아·군부·기술관료등의 연계관계가 형성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에반스는 카르도소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제자본이 국가를 매체로 하여 토착자본과 동맹관계를 맺게되는 상황으로 파악함으로써 외부종속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켰다(Evans, 1979). 그는 국제자본·국가·토착자본간의 3자동맹(triple alliance)은 전부 결합종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주변국에서의 자본축적에 이해관계를 같이 함으로 서로가 일종의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어도 국제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에서는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중심부 선진국간의 경쟁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지는 주변국의 교섭능력증대의 가능성 인정하고 오히려 국제자본이 주변국에 의존해야 하는 「종속역전(dependency reversal)」(Duvall, 1978:72)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카르도소나 에반스는 이와같은 종속적발전의 한계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종속적발전을 통해 종속을 탈피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종속이론체계에 도입시킴으로써 제3세계 여러나라의 구체적인 종속적 상황의 이해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에반스에 의해 그 가능성이 지적된 선진국간의 경쟁은 결합종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주변국가의 상품이 여타 선진국시장에

서 경합상태에 들어 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종속적 발전이론의 입장에서는 중심부의 반주변부(Wallerstein, 1974, 1980)<sup>7)</sup>에 대한 경제개방압력을 결합종속체제 또는 3자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 결과 경제개방압력에 굴복하면 외부적 종속구조는 영속화되고 내부적으로는 국제자본이 연계된 부문과 단절된 부문간의 구조적 양분화(structural dualism)가 초래되어 발전의 이익이 그 경제내에서 확산되지 못한 채 외양적 발전에 그칠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종속적 발전이론만으로는 경제개방압력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종속적 발전이론을 표방한 종속논의 전체가 갖는 치명적인 약점은 그 논의가 갖는 복합성(complexity) 내지는 범분야적속성(inter-disciplinary nature)에 있다. 물론 종속론자들은 바로 이점이 종속논의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종속이라는 현상 자체가 변증법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걸친 전분야에서의 상황분석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속논의를 면밀히 살펴보면 주류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구조론자들의 주장이 무시당한 이상으로 주류파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소외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론자들은 신고전학파의 기본가정이 제3세계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제3세계에 적합한 기본가정은 무엇이며 새로운 가정밑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론적 결과를 연역할 수 있는지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발전이 세계경제의 이질화를 초래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교한 이론체계나 실증자료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들고 있는 사례도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체험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속논의가 저발전의 문제를 국내요인분석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적 차원에서의 역학관계로 시각을 넓히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령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개방압력과 같은 종속의 구체적 상황이라든가 개별국가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극히 모

7) Wallerstein은 그의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에서 국가군을 중심부 (center), 반주변부(semi-periphery) 및 주변부(periphery)로 삼분하고 있다. 반주변부를 일방으로는 중심부에 의해 착취당하면서 주변부를 착취하는 국가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Cardoso의 결합종속국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호하고 동의 반복적 이론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종속논의에서는 중심부내에서의 경쟁관계, 주변부내에서의 경쟁관계가 사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발전의 측방으로 제시된 사회주의경제가 갖는 또 다른 종속구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방논의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신고전파적 이론과 종속적 발전이론을 살펴보았다. 두가지 입장으로부터의 대체적인 이론적 含意는 전자가 세계 경제질서에의 참여를 위해 계속적인 경제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는 반면 후자의 입장은 종속적 발전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입장은 어느정도의 경제개방이 불가피한 것인지 과연 완전한 경제개방으로 주변부가 중심부로 편입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결합종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가 어떻게 종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같은 두가지의 대립되는 가설로부터 경제개방압력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개방이라는 장기추세에서 일탈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체계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3.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류파경제이론을 개발도상국이라는 특수상황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오류는 그 이론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이라기 보다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근대경제학에서 방법론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맥럽의 지적대로 ‘대다수 경제학자들에 의한 방법론에 대한 反感’은 초기의 경제학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서로 다투어 제시하려는 경향에 대한 혐오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방법론의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실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연구에만 골몰하게 되었다 (Machlup, 1978:63). 그 결과 밀(J.S. Mill)流의 고전파적 귀납법이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기간동안 소위 비엔나씨클(Vienna Circle)과 미국식 실용주의자들에 의한 ‘과학적 설명의 가설—연역모형(the hypothetico-deductive model of scientific explanation)’에 의해 대체된 후 적어도 경제학연구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론으로 존재해왔다(Blaug, 1980:2-13). 사

실 이러한 가설—연역모형이 가장 눈부시게 적용되었던 사회과학 분야가 경제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신고전파이론과 같은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이 사뮈엘슨, 미제스, 프리드만등의 학자에 의해 자리를 잡게된 시점을 20세기 중엽이라고 생각할때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설—연역모형의 방법론은 하나의 일반법칙(universal law)으로부터 출발하여 연역법적 논리만으로 일련의 명제들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을 집대성한 험펠과 오펜하임(C. Hempel and P. Oppenheim)에 의하면 설명(explanation)이란 예상(prediction)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논리적 추론과정을 필요로 하며 설명과 예상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자가 사건후에 위치하는데 반해 후자는 사건전에 위치한다는 사실 뿐이라고 한다. 이를 흔히 설명과 예상간의 ‘대칭성명제(the symmetry thesis)’라고 하는데 과거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 한 결과를 경제예측에 활용하는 방법등이 가장 전형적인 이 방법론적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같이 이와같은 가설—연역모형에 의한 방법론은 포퍼(Popper, 1957), 쿤(Kuhn, 1962), 라카토스(Lakatos)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경제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새로운 방법론논쟁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포퍼는 설명과 예상간의 대칭성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유명한 反證主義(falsificationism)를 전개하였다. 그는 모든 지식을 ‘科學’(science)과 ‘非科學’(nonsense)으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그 기준은 反證의 가능성여부에 있다고 보았다. 그가 밀(J.S. Mill)로 부터 인용하고 있는 유명한 예를 보면 가령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배조(white swan)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고니가 전부 희다는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한사람이라도 흑조(black swan)를 보았다면 그것으로 이러한 추론을 反證(falsify)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實證(verification)과 反證간의 근본적인 非對稱性에 착안하여 포퍼는 과학이란 연구대상이라든가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명제를 수립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의해 특징지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과학이 부여하는 어떠한 종류의 확실성도 無知의 확실성이 뿐이기 때문이다. 포퍼는 과학과 비과학의 차이를 反證性(falsifiability)에 두었지만 反證性의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령 물리학이나 화학등 순수자연과학은 반증성이 가장 높은 과

학으로, 시, 예술, 문예비평등은 그에 정반대되는 비과학으로, 그리고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등은 그 가운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포퍼의 反證主義에 입각하여서도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가장 과학적인 사회과학으로 표방하려면 지금까지의 가설—연역모형적 방법론을 포기하고 모든 경제이론이나 명제를 反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류파경제학자들의 개방—발전의 논리를 개발도 상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단계의 검증 또는 반증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는 가설—연역모형적 방법론에 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개방—발전 명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방—발전명제에 대한 反證可能性은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문제를 둘러싼 논의, 그 중에서도 주류경제학의 입장을 취하는 논리의 전개를 살펴보면 첫번째 단계마저 거의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설사 남의 나라들의 역사적 경험을 끌어들여 첫째 단계의 검토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두번째 단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無知에 의한 無視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령 과도한 경제개방에 의한 남미제국의 저발전이라는 사례는 개방—발전명제를 지지하는 사례보다는 적은 사례일지는 몰라도 마치 한마리의 검은 고니처럼 개방—발전명제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비주류파경제이론 특히 종속론적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보자. 종속이론이 의존하고 있는 최대의 또는 거의 유일한 방법론은 역사주의에 입각한 방법론이며 프랑크를 비롯한 많은 종속이론가들이 맙스류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이유도 방법론상의 제약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초기종속이론가들의 논리는 역사적사실에 입각하여 귀납론적으로 명제를 추종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파적 귀납론을 거의 유일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科學에 있어서의 當爲의 方法論(normative methodology)과 實證的 歷史(positive history)간에는 일종의 수수께기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블라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학의 역사를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 간의 차이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 기술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知的歷史를 서술하는데 있어 推論的 誤謬(inductive fallacy)를 범하는 것이다. 연역법 자체에 대해 포퍼와 같은 회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를 기술’ 하려는 사람은 ‘일어나야 마땅한 것을 기술’ 하려는 입장으로 그들의 입장이 바뀌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적어도 방법론적으로는 방법론으로부터 해방된 역사주의와 역사로부터 이탈한 방법론간에는 일종의 악순환(vicious circle)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라카토스는 칸트의 ‘역사가 없는 철학은 공허하며 과학으로서의 철학이 없는 역사는 맹목적’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흔히 종속이론의 논의에서 그리고 특히 종속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정책권고들에서 일종의 맹목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 없는 역사주의가 갖는 맹목성 때문이다. 카르도소같은 학자들이 종속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어느정도의 방법론적 과학성을 종속논의에 도입하지 않는 한 종속이론 자체의 이론적 도약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경제학에서도 방법론논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주류경제학이 사용해온 방법론 즉 가설—연역모형에 의한 방법론에의 아짐은 적어도 전체 사회과학방법론의 추세에서 일탈하는 것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역사주의에만 편집하는 종속론적 방법론 역시 과학적 방법론과 결합되지 않는 한 맹목성을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환국가의 경제개방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체계와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 IV. 새로운 이론체계와 방법론의 모색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경제개방압력이라는 구체적 상황문제를 놓고 중심이 되는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을 개관하여 보았다. 먼저 이론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신고전파적 입장이나 종속적발전론의 입장이 다같이 자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왈러스 타인(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이나 오도넬(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이 부분적으로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sup>8)</sup> 왈리스타인의 이론은 적어도 한국경제를 반주변부라는 주변부로부터 발전된 범주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탄력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반주변부내에서 개별 국가의 상황을 설명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역시 경제발전이 권위주의와 병행될 수 있다는 현실설득력을 제공하지만 남미의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최근 독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자주적 발전이론(Theory of Autocentric Development)」을 하나의 이론적 틀로 제시하고 싶다.<sup>9)</sup>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리와 실증연구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일단 「전환국가」로 정의하기로 하고 상당한 수준의 세계경제에의 병합이 진행된 반주변부 또는 결합종속적 경제로 시작한다고 하자. 이러한 단계에서 개방경제체제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본다. 첫째, 이론적으로 개방체제의 포기는 곧 다시 주변부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증적으로도 개방의 정도와 경제발전은 정의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Pyo, 1985).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경제개방을 지향할 수는 없다. 무분별한 경제개방의 지향은 소위 3자동맹에서 국가의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그 균형이 파괴되고 수출증대를 위한 수입개방, 수입개방과 병행되어야 하는 자본·서비스 부문의 개방, 그 결과 기술·자본수입의 대가지불을 위한 수출증대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방정책홍보자료에서 싱가폴, 홍콩 및 네델란드를 모델로 삼고 있으나, 싱가폴, 홍콩은 전부 도시국가로 수입자유화를 지향하면서도 얼마든지 수출촉진이 가능한 국가이고 네델란드는 EC라는 거대한 시장에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대외의존이 가능한

8) I.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 & II* (1976) 및 G.A.O'Donnell, *Modernization &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의한 한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해석은 김성국,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 경제” 「한국사회와 재인식 1」을 그리고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한상진 「세계정치체제와 관료적권위주의 : 오도넬이론과 그 비판」, 한울 참조.

9) Menzel & Senghaas는 주로 아시아권 국가의 발전경험에 대한 일련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와같은 발전전략에 대한 명제가 생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자주적 개방체제의 지향은 상호모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호모순성을 안고서도 성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전환국가의 제약조건인 동시에 마지막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변형윤교수는 ‘국내개혁과 인적투자가 경제개발의 요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주적 발전의 도모가 최대의 과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변형윤, 1980:51, 1985). 조순교수는 지난 20년동안의 한국경제의 성장유형을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성장은 유후자원이 고갈되는 순간에 끝나버리고 만다고 지적하였다(조순, 1981). 조교수는 노동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향상에 의해 얻어지는 성장을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으로 정의하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기조는 이러한 내연적 성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개방경제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수출집착에 의한 성장목표설정,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개방경제정책의 추구를 경계해야 된다는 논리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도 다양한 정책권고(변형윤 1980:63, 89, 121, 조순 1981: 28)<sup>10)</sup>가 수렴되지 못한채 무리한 중화학공업정책이 추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방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책기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 점에 관한한 정부가 표방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숙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개방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선진국간의 경쟁을 이용함으로써 「종속역전」을 도모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개방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개방의 속도와 범위는 현재의 대외의존도를 크게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대GNP 수출입비율, 대GNP 및 대수출외채비율에서 더 이상 이탈시키는 경제개방 정책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둘째, 상품수입정책의 자유화에는 긴급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등의 구제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서비스·자본 시장의 개방은 그러한 구제조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 시장은 각국의 경제개방 역사를 통해 볼 때 거의 완벽한 선진국경제를 이룬 후에야 추진되었던 것이

10) 조순교수는 「지수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고용문제, 농업진흥문제, 교육문제등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는 노동집약적이라는 근거에서, 그리고 그 고용 창출적 기능을 기대하여 이 부문의 개방이 요구되고 있으나 (Ewing, 1985, Shelp, 1984) 서비스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독과점적 구조를 갖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영역이 국내에 귀속 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인 것이다. 금융·보험업이 위낙 낙후되어 있으므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낙후된 내적 원인 즉 정책부재를 호도하는 역할 밖에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아직 국내에서 산업으로서 분류되지도 못한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요구는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요구이다.

세째, 미국이 개별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개방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한·미·일 3국간의 무역균형을 동시에 모색하는 회담을 제안하여야 한다. 일본은 한·미·일 3국간의 방위 회담은 소련·북한을 의식하여 회피하여왔으나, 무역에 관한 한은 한·미·일 무역회담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과의 양국협상을 가능한한 지양하고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개방압력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그리고 또한 거의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종속역전의 논리를 원용하는 것이다. 즉 현재 전환국가의 위치를 향유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발전전망은 멕시코·브라질과도 틀리며 내수시장의 규모면에서도 대만·홍콩·싱가포르와 다르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중심부내에서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물론 정치·군사적 이유때문에 미국·일본에의 의존이 심화될 수 밖에 없었지만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둘러싼 선진국간의 경쟁관계에서나 최근 원유도입을 둘러싼 산유국간의 경쟁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종속의 극복은 종속 역전을 모색하면서 종속 또는 대외의존도의 다원화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요청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방법론적 아спект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류경제학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먼저 과거의 자료가 개방·발전명제를 어느정도 충분히 수락하는지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그러한 설명으로부터 예상, 즉 정책적 권고로의 직선적인 비약을 폐하기 이전에 이를 反證하는 사례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종속론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방법론을 모색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권고도 교조

주의라든가 맹목적 패러다임이라는 비판으로부터 크게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개방문제는 분명 이론적으로는 물론 방법론적으로도 우리에게 二重的思考를 요청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도 이것은 전환국가에서 살고 있는 社會科學徒들이 벗어날 수 없는 思考의 울타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박우희

1983 “한국의 경제：사상·이론·현실”，유풍출판사

1985 “개방압력과 개방정책,” 사회발전연구소 주제발표 사회발전연구소 월간소식  
1985. 11

#### 박현채

1985 “한국자본주의 전개의 제단계와 그 구조적 특징”, 한국사회 재인식 1, 한울  
변형윤

1980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지식산업사

1985 경제개발계획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연구, 유풍출판사

#### 신용하

1986 “미국의 개방압력과 일본의 무역팽창정책”, 신동아 1986. 1.

#### 이대근

1985 “주체적 발전전략과 과제”, 한국자본주의론(이대근, 정운영편), 까치

#### 조 순

1981 한국경제의 현실과 진로, 비봉출판사

#### 표학길

1985 국제무역론, 무역경영사

#### 해외협력위원회

1985. 8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 Amin, S.

1976 “Underdevelopment and Dependence in Black Africa: Origins and Contemporary Forms,”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0, No. 4.

#### Bhagwati, J.

1958 “Immiserizing Growth: A Geometric Note”,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71 “The Generalized Theory of Distortions and Welfare” in J. Bhagwati et al. (eds.),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Amsterdam: North Holland)

#### Blaug, Mark

1980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Brecher, R. & Diaz-Alejandro, C.  
1977 "Tariffs, Foreign Capital and Immiserizing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Cardoso, F.H.  
1972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74 (July-August 1972)  
1973 "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A. Stepen (ed.) Authoritarian Brazi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arr, E.H.  
1941 The Future of Nations: In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Paul Kegan, Trench Trubner and Co. Ltd., London, England
- Deardorff, A.V.  
1979 "Weak Links in the Chain of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Duvall, R.D.  
1978 "Dependence and Dependencia Theory: Notes toward Precision of Concept and Argu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1 winter 1978.
- Economic Planning Board  
1985 Economic Bulletin, November 16.
- Evans, P.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s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Ewing, A.F.  
1984 "Services Trade and LDCs",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 19, No. 2 (March-April, 1985)
- Frank, A.G.  
1966. 9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Monthly Review, Vol. 18, No. 4.  
1967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Hong, Wontack  
1985 Import Liberalization and Industrial Structural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Meeting (summer)
- IMF  
1985. 6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Jones, R.W.  
1956~1957 "Factor Proportions and the Heckscher-Ohlin Model," Review of Economic Studies, 24.
- Krueger, A.O.

- 1977 "Growth, Distortion, and Patterns of Trade among Many Countries," Princeton Studie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40.
- Kuhn, T.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akatos, I.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Philosophical Papers, J. Worrall and G. Currie (eds.), Vol.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achlup, Fritz  
1978 Methodology of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New York.
- Myrdal, Gunnar  
1968 Asian Drama, Vol. III, Pantheon, New York.
- Ohlin, B.  
1933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Popper, K.  
1957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Harper Torch-Books(reprinted 1965).
- Prebisch, R.  
1962.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 Pyo, H.K.  
1985 External 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quir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Dependency Issue in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e 6~8, 1985)
- Samuelson, P.A.  
1948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qualization of Factor Prices," Economic Journal, LVIII, June.
- Santos, T. Dos  
1970. 5 "The Structure of Depen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60, No. 2.
- Shelp, R.K. et. al.  
1984 Service Industries and Economic Development, Pragers Publishers.
- Vernon, R.  
1966. 5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 System I, Academic Press, New York.

- 1980 The Modern World System II, Academic Press, New York.
- Ward, Benjamin
- 1972 What's wrong with Economics? Basic Books Inc., New York.
- World Bank
- 1984 World Development Report.
- Young, Soogil
1984. 10 Problems of Trade Liberalization in Korea, paper presented at Workshop  
Meeting Organized by Trade Policy Research Center, London.